

# 4·10 총선 끝... 검경, 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광주 41건·전남 53건 위법 접수 허위사실 공표·기부행위 등 혐의 지방선거 땀 대부분 벌금형 그쳐

4·10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 과정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조사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41건이 접수돼 61명이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중 27건, 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남은 53건의 위법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고발 12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건, 협조요청 2건이다.

광주 41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돼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후보는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이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광주 서구을) 후보는 민주당 양부남 후보를 흡혈귀 모습을 한 나쁜 사람·검사로 묘사하는 로고송을 표출해 고발당했다.

당선자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실제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00만원 안팎의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이용재 전 전남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대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방선거 당시 광양시장 후보로 나서려 했던 이 전 의원은 공병과 함께 예비 후보자 등록 전인 2021년 11만5000여명의 연락처로 출마 의사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완준 전 화순군수도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전 군수는 2022년 화순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

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8만6000여건의 ARS 전화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초단체장 선거 낙선자들도 벌금형에 그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수 예비후보 A(66)씨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제품을 정가의 6분의 1수준으로 판매하고, 공약집을 주택·상가 우편함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함평군수 후보 B(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B씨는 중앙당으로부터 2조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홍보

한 것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돼 기소됐다.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 500여명 중 200여명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다.

광주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벌금 규모는 줄어든다”며 “금품 등이 오가는 등 불법 선거가 판치기 어려운 환경은 마련됐지만 상호 비방전은 더욱 과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선거 관련 무차별적인 고소는 검·경의 수사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 아버지 찌른 고교생 체포... 술자리 동석 지인 살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본투표 당일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나주경찰은 10일 아버지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손주중상해)로 고등학생 A(17)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전날 오후 8시10분께 나주시 소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얼굴·배 등을 흥기에 찢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범행 직후 흥기에 찢린 채 스스로 파출소를 찾아온 B씨 신고를 받고 출동,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찾기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경찰도 술자리를 함께 한 선배를

흥기로 찢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50대 남성 C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이달 초 고흥군 모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D씨를 흥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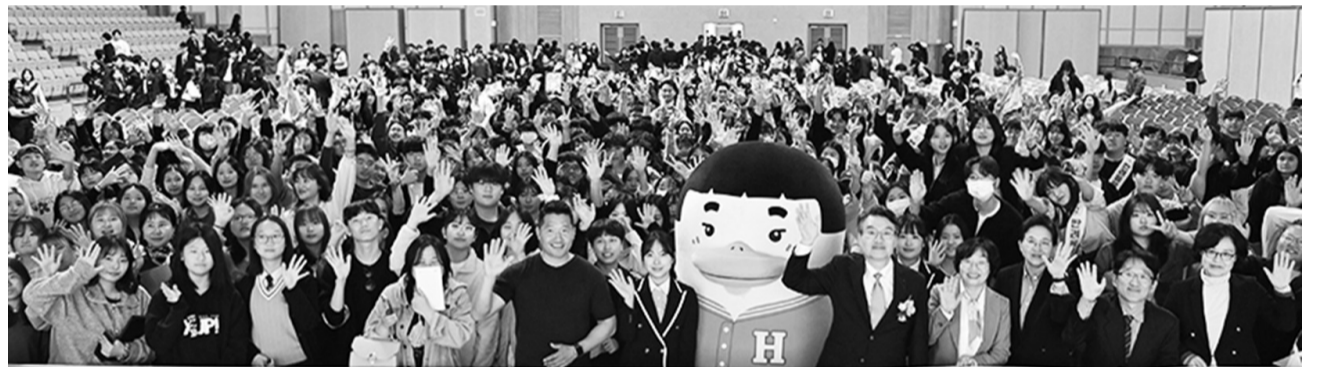
숨진 D씨는 앞서 지난 3일 지역 내 장터 주차장에서 행인에 의해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숨진 B씨의 행적을 추적, 숨지기 직전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C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붙잡았다.

검거된 C씨는 정확한 범행 시점·장소와 동기 등에 대해 일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송민섭 기자



—일시: 2024. 4.9(화) 13:30~ —장소: 문화체육관 —주최: 호남대학교 —후원: 광주광역시 관공서

### 개통령 강형욱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인식제고”

호남대서 ‘반려동물 인식 제고’ 토크콘서트 박상철 호남대 총장과 대학생 등이 지난 9일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강형욱 훈련사(주보듬컴퍼니 대표)의 토크콘서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형욱 훈련사는 ‘개(犬)통령’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견 훈련사이다. 호남대 제공

## 투표 후 실종된 80대 신고 5시간 만에 귀가

4·10 총선 투표 후 귀가하지 않은 80대 노인이 실종 5시간 만에 집으로 귀가했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투표소를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80대 남성 A씨가 실종 신고 됐다.

A씨의 가족은 그가 2시간 가까이 귀가하지 않자 같은 날 오전 9시56분께 경찰

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월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행적을 뒤쫓았다.

경찰은 A씨가 집 인근을 배회하다 오후 2시40분께 자진 귀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 광주·전남 흐리지만 낮엔 포근... 일교차 ‘주의’

### 일부지역 천둥·번개 돌풍 소나기

11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일 광주·전남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온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12일은 25도 내외로 오르겠다.

다만 일교차는 10~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 낮최고기온은 17~20도가 되겠다.

12일 아침최저기온은 8~12도, 낮최고

기온은 20~25도로 예측됐다.

11일 오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다. 서해남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12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짐에 따라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전남해안에는 높은 물결로 인해 만조 시 저지대 침수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이 기자

## 의대증원 대립각... 의정갈등에 ‘커지는 의료공백’

### 전대·조대 의대 15일 학사일정 대척수립 불구 현장혼선 여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10일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 측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교수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개강, 공식 학사일정을 시작키로 의결했다. 앞서 전남대 의대는 재학생 732명 중 78.5%에 해당하는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선대 의대 역시 오는 15일 이후부터

학사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조선대 역시 전체 의대생 725명 중 80% 남짓인 600여 명이 이미 휴학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한 달 넘게 강의·실습 일정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집단 유급만이라도 막아보고자 연기해온 학사 일정을 재개한 것은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응급의료 현장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엔 전년동기대비 병상 가동률이 77%에서 51.7%로 떨어졌으며 외래환자 수는 20% 감소했다. 수술 건수도 48%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대병원은 평소 대비 병상 가동률 70%, 수술 진행률 50%, 외래진료 90%

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교수 등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면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

최근 발가락을 다쳐 전지 8주 진단을 받은 정모(32)씨는 “당장 침실을 심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상이었다. 광주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지방으로 내려가 입원했다”며 “CT를 찍기 위해 문의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어서 받지 못했다. 잘못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지인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 어떻게든 이 사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달라진 건 없다. 신뢰하는 대학병원에 갈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중복 투표될 뻔... ‘타인 신분증’ 못 걸러낸 선관위

### 90대 지인, 주운 신분증을 착각 고의성 없어...무효처리 등 검토

광주에서 한 시민이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사전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일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광주서구선관위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이날 오전 10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제2투표소에서 80대 유권자 A씨가 ‘중복 투

표’ 의혹을 받아 투표를 제지받았다.

선관위는 신분 확인 절차에서 A씨가 시스템상 ‘사전 투표 참여자’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 임시 발급받은 신분증을 가져온 것이다”며 “사전 투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지인 관계인 90대 여성 B씨가 A씨의 신분증을 제시한 뒤 사전투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떨어뜨린 신분증을 경로당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B씨는 당시 A씨의 신분증을 본인 것으로 착각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령인 B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A씨 신분증을 통해 사전투표에 반영된 표를 인정하는 한편, A씨에게 재투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신분증 대조 절차를 소홀히 진행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B씨의 투표를 무효 처리하거나 재투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강주비 기자